
인증·지정


직접지원


간접지원


준수사항

www.moel.go.kr

알아두면 유익한 사회적기업 제도 안내서



고용노동부


목 차CONTENTS

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 03

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11

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29

이런 행위는 안돼요 41



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

사회적기업이란
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
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

1

사회적기업이란



사회적기업 :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·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

–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, 우리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

* 취약계층: ①저소득자(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% 이하) ②고령자(55세 이상) ③장애인 ④성매매 피해자 ⑤장기실업자(1년)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

** 사회서비스: 교육, 보건, 사회복지, 환경, 문화, 보육, 간병 등

● 사회적기업이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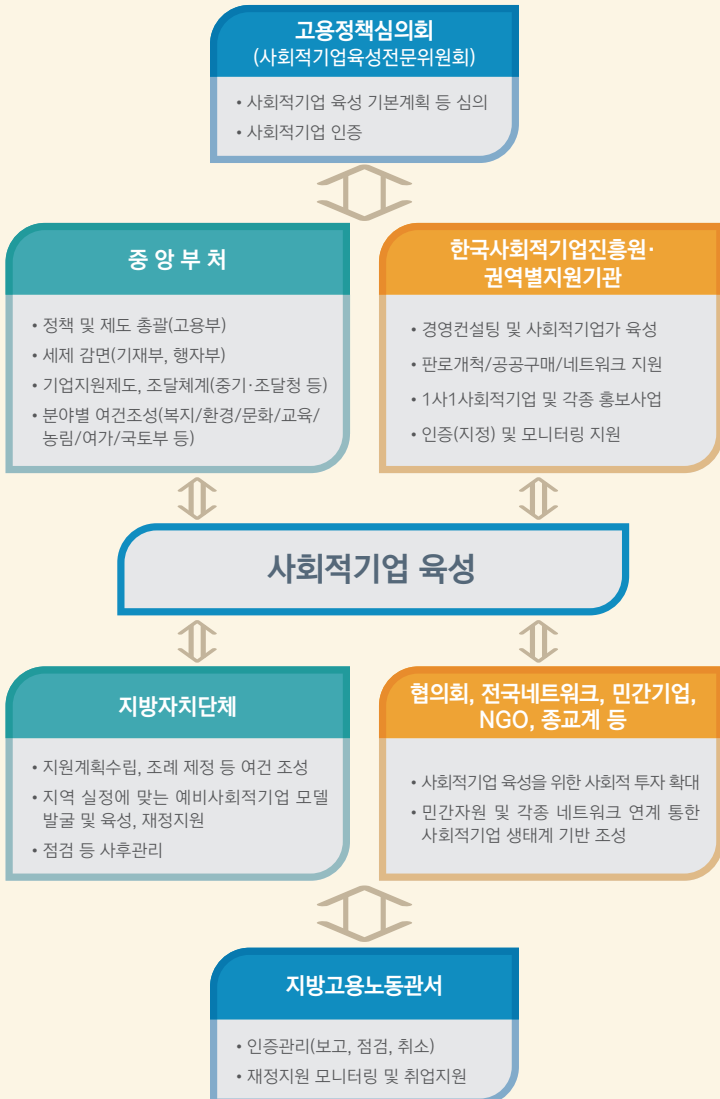
–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,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

● 예비사회적기업

–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업

2

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



3

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



● 인증 및 지정요건

구분	사회적기업(인증)	지역형·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(지정)
법령	사회적기업 육성법	○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○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
요건	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회사,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	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회사,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
	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(6개월 이상)	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할 것(3개월 이상)
	③ 사회적 목적 실현 (취약계층 고용·사회 서비스제공 등)	③ 사회적 목적 실현 (취약계층 고용·사회 서비스제공 등)
	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	④ -
	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(매출액이 노무비의 50% 이상)	⑤ -
	⑥ 정관·규약 등을 갖출 것	⑥ 정관·규약 등을 갖출 것 (상법상 회사등의 경우)
	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이상 사회적 목적에 위해 재투자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	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이상 사회적 목적에 위해 재투자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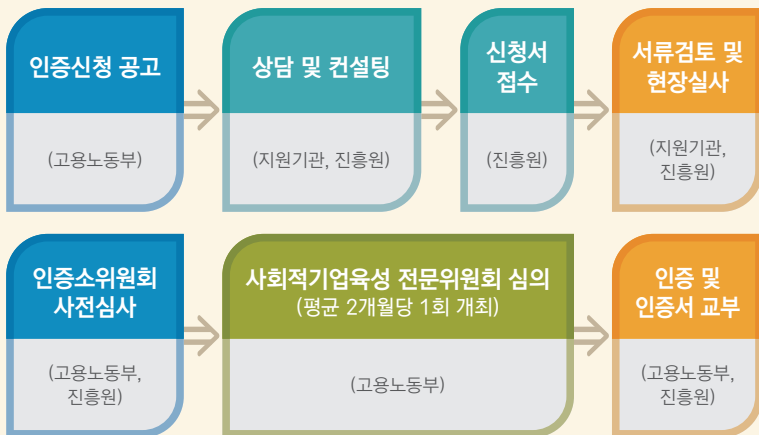
● 인증·지정 유형



유형	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기준
일자리 제공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일 것
사회서비스 제공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일 것
혼합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% 이상일 것
지역사회 공헌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직의 주된목적이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일 것 •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, 소외,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일 것 •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, 마케팅,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일 것
기타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,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

● 인증 및 지정절차

– 인증



– 지정



*부처형의 경우: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위 절차에 따라 지정

● 인증·지정 취소 및 제한기간

구분	인 증	지 정
취소 요건	<p>○근거: 법 제18조제1항(인증의 취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.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.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	<p>○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 ○예비사회적기업지정지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.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,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- 폐업,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운영되지 않는 기업 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4. 기타 자치단체장의 지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
인증 및 지정 제한 요건	<p>○근거: 법제18조제2항, 시행령 제12조의3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<p>가.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나.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다.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라. 고용부장관이 사업목적, 내용, 임원·근로자 등 구성원,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</p>	<p>○예비사회적기업지정지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정만료·취소·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<p>가.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나.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다.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라.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, 내용, 임원·근로자 등 구성원,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소 등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3.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, 1년간 지정신청 제한
제한 기간	○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	○만료, 취소, 반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

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

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지원

직접지원 내용
일자리창출지원
전문인력지원
사업개발비지원
사회보험료지원

1

직접지원 내용



● 사업 및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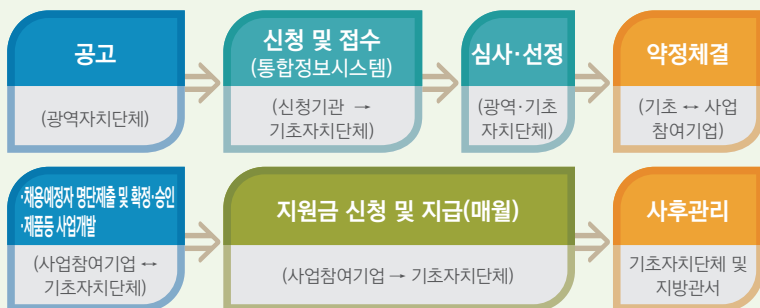
지원제도		지원내용	지원대상	
			예비	인증
일자리 창출사업	일반인력 채용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○ 최대 50인 한도, 5년간 지원 (예비2년, 인증3년) ○ 지원수준: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+4대 사회보험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비 1년차 70%, 2년차 60% - 인증 1년차 60%, 2년차 50%, 3년차 30%+20% (계속고용) * 지원연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	○	○
	전문인력 채용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략기획, 회계, 마케팅 등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○ 지원한도: 월 200만원~250만원(통상임금기준) ○ 최대 5년간 지원(예비2년, 인증3년) ○ 지원인원: 전문인력 3명(예비 1명) ○ 지원수준: 자부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비 1년차 20% → 2년차 30% - 인증 1년차 20% → 2년차 30% → 3년차 50% * 지원연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	○	○
사업개발비 지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술개발, R&D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○ 연간 1억원(예비 5천만원) 최대 3억원 ○ 5년간 지원(예비2년, 인증3년) * 지원회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회차 10% → 2회차 20% → 3회차 이상 30% 	○	○
사회보험료 지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○ 최대 50인 한도, 인증기업만 해당 ○ 지원기간: 4년, 월117,580원('16) 	-	○

● 최대지원기간

– 사업참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초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5년

구 분	일자리창출지원, 전문인력, 사업개발비	사회보험료
최대지원 기간	(예비) 지정기간내 (인증)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	
지원기간 기산방법	(예비)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(인증)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	(인증)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
<p>– 최초지원개시일: 모든 재정지원사업 (일자리창출, 전문인력, 사업개발, 사회보험료)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를 말한다.</p> <p>* 예시: 일자리창출 '16.6.1./ 전문인력 '16.8.1/ 사업개발비 '16.10.1 → 최초 지원개시일은 '16.6.1임</p> <p>– '16년 전에 지원받은 사업은 기존 사업별 최대지원기간 적용</p>		

● 참여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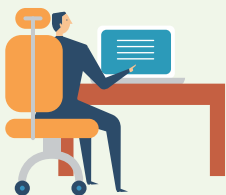


* 다만, 사회보험료는 약정체결 절차없이 사회적기업의 신청에 따라 확인 후 지급

- 지원금 지급신청은 통합정보시스템으로(www.seis.or.kr) 하시면 됩니다.
- 궁금한 사항은 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
2

일자리창출지원



참여자격

- 사회적기업
- 예비사회적기업

*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업

참여제외 대상기업

-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
-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
-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'30%'에 미달하는 기업
(다만,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50%)
-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
(감원)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

—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지원개시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
조정(감원)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기업(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(가사간병 서비스, 산모신생아도우미, 장애아동재활치료, 장애인활동보조, 노인돌보미, 지역사회투자사업 등)
- 지속적·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·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
-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
 -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,
 -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%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
- 불법 시위를 주최,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, 제공하여 수사·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
-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,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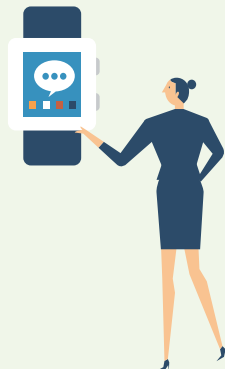
참여제한자

- 사업참여기업 대표자·등기임원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, 직계 존비속
 - 다른 직업(주 30시간 이상)을 갖고 있는 자
 - 사업참여기업에서 주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 - 지원개시일(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)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
-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
- ①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(단,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)
 - ②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고용 중인 자
 - ③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
 - ④ ‘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미만’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, 장애인,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
 - 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근로자
- 지원개시일(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)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 기업 또는 관련기업,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
 -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(주주, 조합원 등)
 - 외국인(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)

-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-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 (대학원생 포함)
-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

지원내용

- 지원기간: 12개월(재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약정)
 - * 재심사 신청은 지원기간 종료일 90일전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안내
- 최대지원기간: 5년
- 지급내용: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(9.36%)
- 지급수준: 참여연차별로 '지원 비율' 차등
 - 예비: (1년차) 70%, (2년차) 60%
 - 인증: (1년차) 60%, (2년차) 50%, (3년차) 30%+20%(계속고용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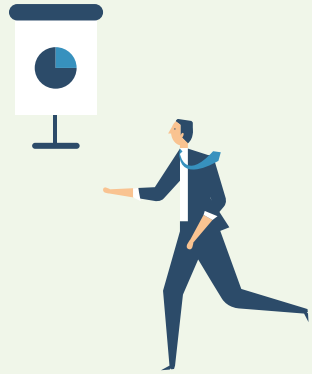
3

전문인력지원

참여자격

- 사회적기업
- 예비사회적기업

*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업



참여제외 대상기업

-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
-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(감원)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
 -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지원개시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 조정(감원)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
-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
- 불법 시위를 주최,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, 제공하여 수사·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
-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,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

참여제한자

- 사업참여기업 대표자·등기임원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, 직계 존비속
- 다른 직업(주 30시간 이상)을 갖고 있는 자
- 사업참여기업에서 주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- 지원개시일(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)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
 - 단,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(단, 채용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)하며,
 -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서 자치단체에서 전문인력 지원을 받아 사용한 경우, 본 지침의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속지원 가능
- 지원개시일(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)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,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
-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(주주, 조합원 등)
- 외국인(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)
-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-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(대학원생 포함)
-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

지원분야 및 자격

● 지원분야

- ① 경영(기획, 인사·노무, 경영 및 진단 등)
- ② 회계(세무, 감정평가 등)
- ③ 마케팅(광고, 홍보, 상품기획, 행사기획, 무역, 영업 등)
- ④ 능력개발(교육훈련 등)
- ⑤ 법률(법무, 지적재산권 등)
- ⑥ 제품·기술개발,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
- ⑦ 문화·예술·디자인·영상·방송(작가, 출판, 창작, 공연, 영화, 연극 등)
- ⑧ 정보통신(컴퓨터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웹 정보시스템 등)



● 자격요건

지원 수준	200만원	250만원
경력 요건	<p>①경영, 회계, 마케팅, 능력 개발, 법률, 제품·기술 개발, 생산관리 및 기술 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</p> <p>②문화·예술·디자인·영상·방송 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</p> <p>③위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(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)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 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, 심사하여 지원 가능</p>	<p>가.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,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, 회계, 마케팅, 능력개발, 법률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</p> <p>나.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,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·기술개발,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</p> <p>다.문화·예술·디자인·영상·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</p> <p>라.위 '가~다'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(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)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가능</p> <p>마.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</p> <p>바.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,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</p>
자격 요건	<p>○ 기사·산업 기사·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</p>	<p>가.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, 「변리사법」에 따른 변리사,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, 「관세사법」에 따른 관세사, 「공인노무사법」에 따른 공인노무사,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,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</p> <p>나.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, 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, 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, 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, 우수 숙련기술자</p>
학력 요건	<p>○ 각 전문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</p>	<p>○ 각 전문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(수료자를 포함함)</p>

지원내용

- 지원기간: 12개월(재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약정)
 - * 재심사 신청은 지원기간 종료일 90일 전부터 가능
- 최대지원기간: 5년
- 지원인원: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(단,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은 3명), 예비 사회적기업은 1명
 - 다만,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(예비사회적기업 15명이상)
- 지원한도: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따라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
- 지급수준: 참여연차별로 ‘자부담’ 차등
 - 예비: (1년차) 20% → (2년차) 30%
 - 인증: (1년차) 20% → (2년차) 30% → (3년차) 50%





사업개발비지원



참여자격

- 사회적기업
- 예비사회적기업

*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업

참여제외 대상기업

-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
-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개발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
- 불법 시위를 주최,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, 제공하여 수사·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
-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,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

지원불가 항목

- 인건비, 퇴직적립금, 근로자 복지 비용
-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
- 유형의 시설·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
- 사무용품, 공과금,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
- 인사·노무·회계·경영컨설팅 비용
-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

*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 사업비의 20% 한도로 인정

- 회계감사 비용, 소송대리 비용
- 보험료, 기부금, 자금조달비용(대출 이자), 각종 세금(부가세 등)
- 교육훈련비
-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
-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

지원내용

- 연간 지원한도: 예비 5천만원, 인증 1억원
- 최대지원금액: 3억원
- 최대 지원기간: 5년
- 지원수준: 참여회차별로 '자부담' 차등
 - (1회차) 10%, (2회차) 20%, (3회차 이상) 30%

사회보험료지원



참여자격

- 사회적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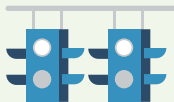
*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업

참여제외 대상기업

-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·전부를 지원받는 기업

* 예: 두루누리사업

- 불법 시위를 주최,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, 제공하여 수사·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
-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,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



지원제외 대상

- 사업참여기업 대표자·등기임원의 배우자, 형제 자매,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, 직계 존비속

지원내용

- 지원기간: 4년
- 지원한도: 50명
- 지원수준: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17,580원
 -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1,340원($\approx 6,030\text{원} \times 209\text{시간} \times 0.9\%$)
 - 산재보험은 1인당 월 8,820원($\approx 6,030\text{원} \times 209\text{시간} \times 0.7\%$)
 - 건강보험은 1인당 월 40,710원($\approx 6,030\text{원} \times 209\text{시간} \times 3.26\%$)
 - 국민연금은 1인당 월 56,710원($\approx 6,030\text{원} \times 209\text{시간} \times 4.5\%$)

* 매년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



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

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

간접지원

경영지원

공공구매

시설비 등 지원

공동주택단지 내 입주공간 설치

세제지원

1

간접지원



● 사업 및 지원내용

지원제도	지원내용	지원대상	
		예비	인증
경영지원 등	○ 사회적기업의 설립(인증)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·세무·노무·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	○	○
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	○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* 대상(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): 국가기관, 자치단체, 공기업, 준정부기관 등 777개소('15년 실적 대상)	-	○
시설비 등 지원	○ 사회적기업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 국·공유지 임대 등 지원 * 일반대부(미소금융, 중소기업 정책자금), 신용보증대부(사회적기업 전용특별보증, 사회적기업 나눔보증)	△ (미소 금융, 나눔 보증)	○
세제지원 제공	○ 사회적기업에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, 향후 2년 50% 감면 ○ 취득세·등록면허세 50% 감면, 재산세 25% 감면 ○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	-	○
	○ 내국법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	-	○



경영컨설팅

- (예비)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조직으로서 자립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
- 기초컨설팅

구 분	기초컨설팅	
	경영코칭	멘토형
대상	(예비)사회적기업	
단계	초기단계	초기단계/성장단계
주요내용	인사·회계·법무 분야 등의 경영코칭 (Coaching)을 제공하여 기업의 기본 시스템 구축 지원	선배 사회적기업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후발 사회적기업의 목표관리 및 전략 개발 등 경영 전반 문제 해결 지원
지원한도	- 연간 1회, 최대 330만원 이내(총 3회 한도)	
기업부담	- 최대 10% 이내	
수행기관	- 기초컨설팅 지원기관 내 통합 경영지원단	
수행절차	신청기업 접수(지원기관) → 사전코칭(통합경영지원단) → 실시계획서 검토 및 승인(진흥원) → 집중코칭(컨설턴트 또는 멘토) → 모니터링(지원기관) → 사후 코칭(컨설턴트 또는 멘토) → 컨설팅 결과 평가(진흥원)	

- 궁금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(031-697-7831 ~7838)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
● 전문컨설팅

구 분	전문컨설팅		
	특화형	지속성장형	공동형
대상	사회적기업		
단계	성장단계	성장단계/자립단계	자립단계
주요내용	특정 분야/주제의 경영 과제와 현안 문제 해결	경영·기술 전분야의 경영 과제와 현안 문제 해결	동종·유사 업종 또는 지역 기업들이 공동의 경영 현안 문제 해결
지원한도	- 총 5회, 5,000만원 이내(연도별 신청한도는 최초 1회 지원만 1,800만원, 2회 이상은 총 지원한도내 지원)		
기업부담	- 지원횟수에 따라 기업 부담 비율 상향(총 컨설팅 금액 대비 10%~40%)		
수행기관	컨설팅기관(컨설턴트)		
수행절차	컨설팅기관 등록(진흥원) → 신청기업 접수(진흥원) → 대면평가(진흥원) → 컨설팅 대상 선정(평가위원회) → 컨설팅 실시(컨설턴트) →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 평가(진흥원)		

- 궁금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(031-697-7831 ~7838)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




공공기관 우선구매

-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,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(재화 및 서비스)을 우선구매토록 함

주요내용

- (대상 공공기관)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*

* 국가기관, 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

- (우선구매 범위) 사회적기업*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

*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7조에 따라 고용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

- (구매실적 등 제출)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공고

- (구매실적 평가)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우선구매 실적 반영

* 공기업 · 준정부기관 「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」 평가 (기재부)

* 자치단체 합동평가 (행자부, 예비사회적기업 실적 포함)

* 지방공기업 「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」 (행자부, 예비사회적기업 실적 포함)

4

시설비 등 지원



정책자금 지원

- 정책자금 지원을 통하여, 사회적기업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

주요내용

구 분	미소금융사업	중소기업정책자금	사회적기업전용 특별보증	사회적기업 나눔보증
수행주체	미소금융중앙재단 선정 사회적기업 분야 복지사업자	중소기업진흥공단	지역신용보증재단 (대출: 기업은행)	신용보증기금 (대출: 국민, 신한, 우리, 기업은행 등)
지원대상	사회적기업 및 서울시·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	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	인증사회적기업	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
지원한도	1억원	매출액의 150%이 내, 최대 45억원 (수도권 제외 지방 소재기업 50억원)	4억원	1억원
대출금리	3%~4%	정책자금기준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	영리 4.6% 비영리 3.6%	대출은행별 설정
비고	1년 거치 4년 분할상환	—	(보증비율) 영리 90%, 비영리 100% (보증료율 및 기간) 연 0.5%, 5년 이내	(보증비율) 100% (보증료율 및 기간) 연 0.5%, 5년 이내

* 대출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

- 궁금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과평가팀(031-697-7771 ~7774)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
공동주택단지 내 입주공간 설치



설치근거: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(국토교통부 훈령 제650호) 제34조의 6제1항 및 제2항

* 제34조의6(사회적기업)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단지는 의료·보육·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(이하 "사회적기업등"이라 한다)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적기업등의 입주공간은 임대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사회적기업등에 제공하며, 수요가 없는 경우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수 있다.

면적기준: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6제3항

③ 사회적기업 등의 입주공간 총면적은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300세대 이상 500 세대 미만 : 35제곱미터 이상
2. 500세대 이상 1,000 세대 미만 : 70제곱미터 이상
3. 1,000세대 이상 : 100제곱미터 이상



주요 지원내용

- 사회적기업이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위한 공간

신청절차

- LH 홈페이지 공고, 사회적기업의 신청 및 LH심사·결정
-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지원처(055-922-5506 ~5507)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


6

세제지원

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

- (근거법령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6 (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
- '16.12.31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'14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분 부터 적용)와 그 후 2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% 감면, 그 후 2년간 50% 감면

* 인증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 소득이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% 감면 + 그 후 2년간 50% 감면

지방세 감면

- (근거법령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의4(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), 제135조(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)
- (취·등록세, 재산세)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50%,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50%,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의 25%를 감면 ('18.12.31 까지)

- (개인지방소득세) '16.12.31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% 감면, 그 후 2년간 50% 감면('14년 도입)

* 인증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 소득이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% 감면 + 그 후 2년간 50% 감면

기부금 인정

- (근거법령)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1항, 시행령 제36조제1항2호 다목, 시행규칙 제18조(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) 제2항
- 내국법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(기부금의 손금산입으로 소득공제 혜택 부여)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 촉진

부가세 감면

- (근거법령)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 제1항 5호·6호,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7호, 제36조 제1항 제4호
-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(간병, 산후조리, 보육)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



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

이런 행위는 안돼요

이것만은 꼭!


부정행위란?

어떤 경우 약정해지?

부정행위시 불이익은?

1

이것만은 꼭!

 최근에 일부 사회적기업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선량한 사회적 기업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.

- ✓ 사회적기업은 이윤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임을 항상 잊지 마시고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- ✓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,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- ✓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는 도중 근로자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하시면 안됩니다.
- ✓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중복지원은 제한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으면 중복지원으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

부정행위란?



📋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등입니다.

- ✓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
- ✓ 지원금(보조금)의 목적 외 사용(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)
- ✓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
- ✓ 참여제한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
- ✓ 참여근로자 고용관련 서류의 허위작성
- ✓ 참여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서류 허위작성
- ✓ 사업참여기업 선정 신청서(재심사 포함) 및 관련서류 허위작성

3

어떤 경우 약정해지?



- ✓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[사업참여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(일자리창출지원, 전문인력 지원, 사업개발비 지원, 경영지원, 사회보험료지원 등)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 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]
- ✓ 지원약정기간 중 '2회'의 경고를 받은 경우
- ✓ 기초자치단체장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
- ✓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✓ 지원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자체 고용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
- ✓ 지원금(또는 임금)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·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
- ✓ 매출액을 일자리창출지침에 의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
- ✓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배정인원의 50% 이상을 확정·승인받지 못한 경우(이 경우 1년차 지원을 받은 것으로 봄)
- ✓ 전문인력이 지정된 분야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
- ✓ 목적외 사용 등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
- ✓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·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

- ✓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,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
- ✓ 기타 지원약정서에 명시된 사유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즉시 약정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



- ✓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
- ✓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
- ✓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
- ✓ 형사고발
- ✓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2에 따라 명단공개



알아두면 유익한
사회적기업 제도
안내서



고용노동부